

고흥군 1인당 年 진료비 281만원 ‘전국 1위’

노령인구 급증 영향

최소 지자체 보다 2.6배 지출

상위 10곳에 전남 4·전북 4곳

고흥군민이 전국에서 진료비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간 진료비가 281만원으로, 가장 적은 경기 수원 영통구(108만원)보다 2.6배(173만원) 더 지출했다.

특히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 중 1인당 연간 지료비를 많이 사용한 상위 10위에 전남 4곳, 전북 4곳의 기초단체가 이름을 올려, 10곳 중 8곳이 호남이었다.

3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발간한 ‘2017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의료보장(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 인원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고흥군이 281만44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전국 평균 158만5706원보다 122만4738원 많았다. 이어 경남 의령군 277만7564원, 전북

부안군 277만1178원, 전북 순창군 277만724원, 신안군 270만8235원, 영광군 267만4633원, 전북 임실군 265만8111만원, 보성군 265만5682원, 전북 고창군 263만9483만원, 경북 영덕군 263만1627만원 등의 순이었다.

1인당 진료비를 많이 사용한 상위 10위 지자체 중 전남 4곳(고흥·신안·영광·보성), 전북 4곳(부안·순창·임실·고창) 등 호남이 8곳을 차지했다.

이들 지역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30%를 넘거나 근접했다.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고흥과 신안은 각각 38%, 33.1%로 노인 비율이 높았다. 영광은 27.1%, 보성은 35%였다.

연평균 진료비가 가장 적은 지역은 경기 수원 영통구로 107만7972만원이었다. 고흥군민이 영통구민보다 1년에 진료비를 173만2472원이나 더 지출했다.

2017년 기준 사망률이 높은 4대 암(위, 대장, 폐, 간)질환의 의료보장 인구 10만명당 진료 인원을 살펴보면 위암이 313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장암 284명, 폐암

■연평균 진료비 상위 TOP10

〈진료 인원 1인당, 단위:원〉

순위	지역	연평균 진료비	의료보장인구 65세 이상 비율
전국(평균)		1,585,706	13.9%
1	고흥군	2,810,444	38.0
2	의령군	2,777,564	34.0
3	부안군	2,771,178	29.5
4	순창군	2,770,724	30.9
5	신안군	2,708,235	33.1
6	영광군	2,674,633	27.1
7	임실군	2,658,111	31.8
8	보성군	2,655,682	35.0
9	고창군	2,639,483	29.8
10	영덕군	2,631,627	33.8

172명, 간암 145명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위암 진료 인원을 시군구별로 비교하면, 전북 진안군이 78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함양군(739명), 보성군(729명) 등의 순이었다. 반면 광주 광산구는 222명으로 하위 5위

에 이름을 올렸다.

대표적 만성질환인 고혈압의 인구 10만 명당 전국 평균 진료 인원은 1만2136명이었다. 고혈압 진료 인원이 많은 지역은 충남 서천군(2만4741명), 경북 의성군(2만4152명), 진도군(2만3993명) 등이었다. 가장 적은 지역은 수원 영통구(7389명)였고, 뒤이어 창원 성산구(7647명), 광주 광산구(7810명) 순이었다.

인구 10만 명당 당뇨의 전국 평균 진료 인원은 5847명이었다. 당뇨 진료 인원이 많은 지역은 합평군(1만1674명), 고흥군(1만1453명)이 1, 2위를 차지했다.

2017년 기준 전체 진료비는 77조9747억원으로, 2016년(71조9671억원)과 비교해 8.3%(6조76억원) 상승했다.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158만6000원으로 2016년(146만8000원)보다 8.0%(11만7000원) 증가했다.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연보는 31일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참여자치 21, 유치원 임원 겸직 공직자 명단 공개 안하나 못하나

겸직 시·구의원 사퇴 촉구후

슬그머니 입장 바꿔 침묵

발언도 오락가락 배경 의문

광주 한 시민단체가 ‘유치원 임원을 겸하는 시의회, 구의회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공개 선언한 뒤 돌연 침묵을 이어가 그 배경이 주목된다.

단체를 대표하거나 실질적으로 이끄는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이 오락가락 하면서 단체의 입장 변화에 알 수 없는 힘이 작용한 것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

‘참여자치 21’은 지난 21일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을 전수조사하고 결과와 대책을 밝히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단체는 논평에 담은 ‘우리의 요구사항’에서 보육기관 겸직 공직자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복지 분야를 포함한 보육기관(유치원·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감시 기능을 해야 하는 시의회와 구의회 상임위원 중 해당기관 임원 겸직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는 내용이다.

단체 박재만 사무처장은 논평 발표 이후 보육기관 임원 겸직 시의원, 구의원 명단을 공개해달라는 광주일보 요청에 “외출 중이다. 사무실 복귀 후 이메일로 건네겠다”고 했다. 그러다 1시간여 후 “있는 줄 알았던 명단이 우리에게 없더라”고 했다. 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전국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30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비공개 토론회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이들은 한유총의 방침에 따라 검정색 복장으로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집단 휴원 여부를 포함해 정부 대책에 대한 대응수위를 논의했다.

/연합뉴스

초 이들은 언론에 해당 의원의 명단이 있다고 했다.

거듭된 명단 공개 요청에 참여자치 21 박 사무처장은 30일 “우리고 관계라는 게 있어서 줄 수 없다”, “왜 우리에게만 달라고 하느냐, 동료 의원들은 다 알 텐데 그리 문의해달라. 우리도 형편이 여의지 않다”고 말했다.

참여자치 21 조선의 운영위원장도 명단

공개 요청에 30일 “있긴 한데 내부 회의를 열어야 한다. 공개할지 말지, 한다면 언제 어떻게 할지 여부는 장담하기 힘들다”고 했고, 겸직 공직자 규모에 대해서라도 답변달라는 질문에도 “밝히기 곤란하다”고 했다.

정재원 대표 역시 통화에서 “간부들 말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지 세세한 부분은 저는 모르겠다”고 했다.

참여자치 21은 지난 1998년 ‘참여와 자

치를 통한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해 창립됐다. 참여자치 21은 지난 20년 동안 주민 참여예산제 도입을 주도하고, 광주시 총인처리시설 일할 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등 성과를 이뤘다. 지난 19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창립 20주년 기념식에는 자치단체장 등 지역 유력 인사 다수가 참여했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뜨기 06:52 달뜨기 23:36
해지기 17:39 달지기 13:06

산불 조심하세요

고기압 영향으로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건조해지겠다.

광주	맑음	6/15	보성	맑음	3/15
목포	구름많음	8/15	순천	맑음	6/16
여수	맑음	8/16	영광	맑음	6/14
나주	맑음	4/15	진도	구름많음	6/15
완도	맑음	8/16	전주	맑음	7/14
구례	맑음	3/15	군산	맑음	6/14
강진	맑음	5/16	남원	맑음	3/14
해남	맑음	4/15	흑산도	맑음	12/15
장성	맑음	4/14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0.5~1.5
	먼바다	북서~북	1.0~2.5	북서~북	1.0~2.5
남해	앞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0.5~1.0
	먼바다(동)	북서~북	1.0~2.0	북서~북	1.0~2.0
	먼바다(서)	북서~북	1.0~2.0	북서~북	1.0~2.0

◇물때

목포	간조	만조
	11:36 ---:--	06:31 19:25
여수	07:10 20:24	00:57 14:03

◇주간 날씨

11/1(목)	2(금)	3(토)	4(일)	5(월)	6(화)	7(수)
4/16	4/17	6/18	7/19	7/19	9/18	9/18

◇생활지수

	보통
	보통
	보통

노동자 사망사고 사업주 최대 징역 10년까지

원청업체 처벌도 대폭 강화

산업 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안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은 1990년 이후 28년 만이다.

개정안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가 숨질 경우 사업주

에 대한 징역형 상한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높였다. 법인 사업주에 대한 벌금형 상한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대책도 수립됐다. 개정안은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범위를 ‘일부 위험한 장소’에서 사업장 전제로 확대하고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선고할 수 있는 징역형의 상한을 현행 1년에서 하청 사업주와 같은 수준인 5년으로 높였다.

/김용희 기자 kimyh@

광주 남구 제석산 종교시설 조건부 허용…주민 반발

광주 남구 봉선동 제석산에 종교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이를 사실상 허용한 남구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30일 남구에 따르면 남구 도시계획분과위원회는 지난 25일 제석산 일대에 종교시설 부지를 조성하는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를 열었다.

분과위는 심의에서 인근 산책로 보존, 지하 주차장 신설, 종교시설을 가릴 수

있는 나무 조성 등 6개 항목을 조건부로 내걸고 종교시설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환경 파괴와 교통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제석산 인근 주민은 “보전 녹지 지역에 종교시설을 짓기 위해 환경을 훼손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그렇지 않아도 도로가 좁아 불편을 겪고 있는데 시설이 들어서면 교통 체증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한영 기자 young@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1566-9988

8 5 1

1 6 5 2 4

6 8 2 4 7 5 8 1

2 5 1 6 4 9 7 8 3

1 3 0 7 5 8 4 9 2

2 4 6 3 7 1 2 8 0

4 6 2 8 1 0 9 7 3

5 7 6 2 1 4 3 0 2

6 9 1 7 4 9 8 0 0

7 7 0 0 1 3 9 9 9

12 5 point

11 4 point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11+ 3 point

노안수술 시 돋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옛, 밝은광주안과